

'91 팽창예산 허와 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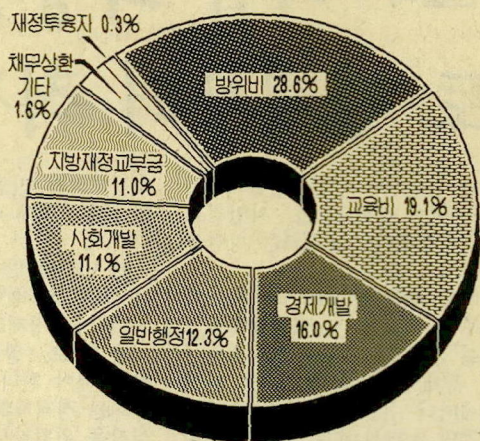
내년에 정부에서 지출하게 될 예산안 가운데 국민복지 증진,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학기술 및 산업지원 등에 쓰일 재원은 몇 부가 중점적으로 배려하려고 노력한 흔적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준만큼 배정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복지증진 등 이들 부문은 현대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기능들이다. 물론 정부자료에는 이들 부문의 재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34.9~27.0% 확대돼

대 지원, 서민주택 건설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 가운데 서민주택 건설비는 38.1%나 늘어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영세민 지원비용은 14.6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원으로 6천4백86억원이 증가할 뿐이다.

과학기술진흥과 산업지원 비용도 9천9백81억원으로 2천1백23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쳐 정부에서 강조하는 성장발달력 확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내년도의 복지증진 비용 등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데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재정구조에서 이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들여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편의상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복지증진 등의 재원이 되는 사업비는 33.1%에 불과하다. 그나마 내년도 비중은 올해의 33.5%보다 1.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 중에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비중은 올해보다 조금씩 상향조정된 11.1%, 16.0%밖에 안된다.

경직경비에 밀려 복지부문 소홀

외형 31% 늘어도 개도국의 59%도로·항만공사 재원 충분치 못해

세입세출예산순계 증가율(25.3%)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분류한 항목 중엔 부문간에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기준이 애매하더라도 관련항목이면 모두 끌어모아 놓아 엄격하게 이 수치대로 배분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실령 정부 발표대로 34.9~27.0%가 늘어난다 해도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볼 때 결코 흡족한 수준은 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내년에 복지증진 비용으로는 올해보다 6천8백42억원이 늘어난 2조8천3백52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 돈으로 내년에 영세민 지원, 불우계층 지원, 의료공급 확

%, 불우계층 지원은 17.8%밖에 늘지 않아 이들 계층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감을 주고 있다.

복지비용이 외형상 31.8% 늘어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보장·보건·주택 및 지역개발에 쓰이는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국개발연구원 자료)하면 우리나라는 89년 현재 2.6%로, 선진국(87년 현재 14.9%)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전체(· 12.6%)에 비해 20%선에 불과하다. 개도국(· 4.4%)과 비교해도 59%선에 그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 수 있다.

도로·항만공사 등에 쓰일 사회간접자본 재원도 2조5천93억

반면 방위비, 교부금, 인건비, 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은 65.6%가 된다. 부문별로는 방위비가 28.6%, 교부금이 20.8%, 인건비가 14.7%, 예비비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 비중이 15%포인트라도 높아진 것은 방위비 증가율이 12.9%로, 일반회계 증가율(19.8%)보다 낮아 방위비 비중이 올해의 30.4%에서 28.6%로 떨어진 데 크게 힘입었다.

또 인건비도 7.8% 증가에 그쳐 그 비중이 16.3%에서 14.7%로 하락해 사업비 비중을 약간이나마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한마디로 방위비와 인건비가 예산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듯이 방위비나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를 손질하지 않고서는 복지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경직성 경비가 클 경우 새로운 재정수요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재정정책의 효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여건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위비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모나 증가율, 지출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정부 재정활동에 속하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기금의 운용 방안이나 중앙정부 재정과의 연계가 애매한 지방정부 예산편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경 기자〉

내년에 정부에서 지출하게 될 예산안 가운데 국민복지 증진,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학기술 및 산업지원 등에 쓰일 재원은 몇 부가 중점적으로 배려하려고 노력한 흔적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준만큼 배정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복지증진 등 이들 부문은 현대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기능들이다. 물론 정부자료에는 이들 부문의 재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34.9~27.0% 확대돼

대 지원, 서민주택 건설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 가운데 서민주택 건설비는 38.1%나 늘어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영세민 지원비용은 14.6

원으로 6천4백86억원이 증가할 뿐이다.

과학기술진흥과 산업지원 비용도 9천9백81억원으로 2천1백23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쳐 정부에서 강조하는 성장발달력 확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내년도의 복지증진 비용 등의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데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재정구조에서 이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들여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편의상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복지증진 등의 재원이 되는 사업비는 33.1%에 불과하다. 그나마 내년도 비중은 올해의 33.5%보다 1.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 중에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비중은 올해보다 조금씩 상향조정된 11.1%, 16.0%밖에 안된다.